

새만금잼버리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관련부처 의견 수렴 거쳐... 도, 내달 본회의 심의통과 목표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했다.

지난 4월 30일 찬성의원 22명으로 발의된 잼버리 특별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의견수렴(5~10월)과정을 거쳤으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과 법안심사 소위 위원, 전문위원에게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잼버리특별법 상정이 지연되

고 있는 시점에 전라북도지사(송하진)와 지휘부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북관련 국회의원과 의단체를 통해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동력 확보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제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진신미 여가부장관을 만나는 입법지원활동 공조와 세계잼버리 행사 이후에도 국제 청소년활동의 메카로 자리잡아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명소가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국가주도

추진 건의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잼버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별첨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지원특별법이 여가위 전체회의(11.15. 예정), 법사위 전체회의(11.28. 예정) 심의를결을 통해

12월 본회의 심의통과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세계잼버리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잼버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유치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5만 여명의 세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대거 참석하는 국제행사로 국가적으로 6조7,000억 원, 전북에는 3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전북연 분석)가 기대되는 대회이다. /김진성 기자

靑, NCS 상임위서 "새美 의회와도 기존 관계 지속 유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했다.

정 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NSC 상임위에서는 지난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분석을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상임위는 미 의회가 그동안 긴밀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 구성된 미 의회와도 기존 관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기에 재개 돼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전북도 예산편성은 이렇습니다" 지난 9일 도청 지방기지사실에서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도 전북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치분권 시행계획, 전북 목소리 반영해야

전북도,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 균형발전 전제 분권 추진 강조

전북도는 지난 9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승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이종협 자치분권위원

회 자치제도과장이 지난 9월 확정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한치홍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후 안성호 분권제도 위원장 주재로 김철모 기획관 등 6명의 패널과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

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지방교부세 교부를 상향(19.24% → 21~22%), 지역자립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

와 지속 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 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정적 조치 선행 등을 건의했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용적 시행계획의 수립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 만들어달라"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 전북도에 1억원 쾌척
내년까지 도 등과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전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를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는 지난 9일 전북도청에서 문정훈 전주공장장과 박종화 노조 전주공장위원장 의장, 김승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1억원을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전달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기금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불의의 교통사고, 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상처 받거나 고통 당하지 않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아동 범죄와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와 관련,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모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세이프 캐어 키트(Safe Care Kit) 사업, 세이프 푸드 아이(Safe Food I) 교육,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법국민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한 제5회 아동학대예방 염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저소득가정을 위한 긴급 구호 물품을 담은 세이프 캐어 키트를 제작해 전주 시내 위기가정과 청소년 여아 가정 2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 80여명이 자립 후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어린이가 안전한 전북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15년에도 학교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 폭력 등 범죄 예방을 위해 8,000만원을 쾌척해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엔 1억8,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색 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오래된 건물도 새 소방규정 지켜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로 바뀐 소방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국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런데 건물주들은 맹렬히 반대한다.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비용 부담 때문에 낡고 위험한 노후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라며 "가난한 이들일수록 재난에 취약하다. 소외된 이들일수록 안전하지 않다. 안전기는 사회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한다. 비통한 하루"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11월 9일 소방의 날이다. 새벽에 큰 화재로 순식간에 일곱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남성으로 부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분이라고 한다"며 "지은 지 35년이 지난 건물은 노후했고 스프링클러는 아

예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엔 비상계단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로 고시원은 비상 사다리가 없었다. 대신 외벽에다 문을 만들고 안강기를 설치해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게 전부다. 총 29개 방이 있는 층에 고작 완강기 한 대"라며 "사실 이 문제엔 법적인 문제가 높은 벽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건물 준공 당시인 35년 전에는 스프링클러도 비상 사다리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건물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며 "그런데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 겨우 소화기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출입계단에 장애물이 없는지,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 종로구 관수동 인근 지상 한 고시원 건물 3층 출입구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